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황도수 □정책위원장:박상인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http://www.ccej.or.k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백인길 운영위원장)
- 문의 : 도시개혁센터(김성달 국장, 윤은주 간사, 02-3673-2146/dongi78@ccej.or.kr)
- 시행 : 2020. 11. 30.(총 5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공론화 결과 반영된 예산 변경도 보이지 않아
- 과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
- 깜깜이 예산 수백억 책정근거도 비공개, 사업비 책정근거 제시해야

예산은 말장난으로 속일 수 없는 증거다. 말로는 아무리 보행광장이니 뭐니를 떠들어도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다. 또한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해온 300번의 공론화 과정에도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변경이 하나도 없다면 그 공론화는 행사의 횃수일 뿐 실효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21세기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21년 서울시에 산안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바람막이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바람막이라면, 적어도 현재까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면서 보이는 의혹들을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고 박원순 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선언한 뒤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9년 9월은 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시기다. 사실상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 과연 해당 시기 진짜 사업이 중단되었을까? ‘GTX광화문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공론화가 한참이었던 2019년 11월 6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광

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18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 해 12월 30일에 세 차례의 기성금을 2020년 7월에 2차례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이 말은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공무원들은 기존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중단을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기인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추진한 계약은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10월 3일, 태조엔지니어링),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교통대책에 따른 영향지역 자원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10월 11일, (주)다른도시) 등이 있다.

게다가 아예 예산서에는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서울계약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계약현황을 보면,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은 2020년 1월 8일에 '광화문 일대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억 8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사업명은 2019년 예산서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이미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전인 2020년 9월에는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억원에 계약한다.

시장은 사업 중단과 공론화를 선언했는데,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중단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 역시, 시기를 조정했을 뿐 변경이 없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묻는다, 시민과의 공론화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든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서울시 관료들의 의지인가?

## 2. 공론화를 반영한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서울시가 300회가 넘는 공론화 과정을 강조할수록 그곳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자괴감만 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적어도 참여한 만큼 협의되고 조정이 되었다면 그 횟수가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지나친 예산낭비 사업인 GTX(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개설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반대한 사항이었다. 백지화가 되었나? 그렇지 않다. 2019년부터 2021년 예산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급기야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2020년 7월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GTX민간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주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했던 광화문역 주변의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오히려 광장의 보행성을 해치는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상부에 보행중심 광장을 만들고 지하에 보행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낮에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 공간을 넓히는 건 기후위기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 역시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일 없이 계속 추진 중이다. 이를 ‘도시활성화과’에서 변경없이 추진 중이고 총사업비가 107억원이나 소요된다. 고작 종각역과 광화문역을 지하로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다. 시의회의 감액을 비롯해서 공사비를 높여 총사업비를 높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도 코미디지만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 하나도 변경된 일이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도 코미디다.

### 3. 투자의 조건인 광장 활용 계획은 어디 있나?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2019년 5월 투자심사 당시, 광장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광장 활용계획을 확정된 상황인가? 사실 어디를 봐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가 시민소통을 위해 만들었다는 <광화문광장> 누리집에는 어떤 정보도 없어서 그렇다. 광장 활용계획이 나왔을까? 안타깝게도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 광장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승인을 했을지 의문스럽다.

### 4.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심쩍은 주민 예산도 집행돼

2020년에만 편성되어 올해 초에 전액 집행된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은 8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광화문 광장 인근 5개동 주민 문화행사 지원’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다. 자치구를 통해서 해당 동의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을 돈인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100% 지급이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마 서울시가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나 했을 반대주민 길들이기용 사업을 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2019년도, 2021년에도 없는 엉뚱한 사업이 배정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 5. 도대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19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총 사업비는 <서울재정포털<sup>1)</sup>>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총

12건의 사업에 388억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5건 사업에 653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서>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9년에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예산은 316억원이었는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은 없이 월대 등 문화재복원에만 266억원이 반영되었다. 최소한의 기본계획 확정 전에 문화재발굴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월대 복원을 위한 사업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화재청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예산에는 기존 예산안의 684억원이 대폭 줄어들어 확정예산으로 427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 다시 3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감액한 대표적인 사업은 공사비항목(문화재발굴, 시민광장 조성)과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 낭비성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로 2020년 사업설명서로 487억원을 제시했다(사업별설명서, 283쪽, 같은 자료 286쪽에는 총사업비가 294억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실수로 보인다). 그런데 2021년 사업설명서로는 동일한 단위사업인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항목의 총사업비가 534억원으로 제시되었다(사업별설명서, 566쪽). 동일한 단위사업명을 가진 사업의 총사업비가 1년 사이에 47억원이나 인상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적어도 2020년 사업설명서와 2021년 사업설명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광장면적만 약간 변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도대체 사업내용도 거의 바뀌지 않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비가 1년 사이에 47억원이 늘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은 예측가능성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포함되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 역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사업은 보통 관료들의 먹이감이 된다. 앞서 말한대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은 1년 만에 사업설명서 상의 총사업비가 47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미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기관 존립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통 행정기구는 필요한 사업을 따라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따라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행정의 경로의존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과 서울시의원 밖에 없다. 그런데 시장이 없으니 그 역할을 서울시의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서울시의회는 고 박원순 시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끝”

---

1) 서울재정포털 <http://openfinance.seoul.go.kr>

2020년 11월 3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